발표 2 토론

「잠재계층모형(LCA)을 활용한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유형 분류: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차이」 토론문

서영민(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끝나지 않은 혁명(incomplete revolution)'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Esping-Andersen, 2014).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초저출산고령화사회로 2024년 도래하면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가 3대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라 한국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비용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중요과제인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의 높은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여 본 연구뿐 아니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더 풍부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 유형 집단과 일·가정 분리 유형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class 1에 해당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일·가정 양립 집단에 비해 class 2인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일·가정 분리 집단의 수가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제도 뿐 아니라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며, 육아지원정책마련보다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도 2024년 6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관련 내용을 지정하였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과 누구나 원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사용 권리를 강화하는 사내눈치해소 정책,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잠재계층에 따른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 필요성의 결과에 따르면, 영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및 유아학비 지원에서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제도의 불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보다 일·가정 양립집단이나 일·가정 분리집단이나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가정 양립집단이든, 일·가정 분리집단이든 결국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이나 초등 돌봄지원은 분명히 맞벌이 가정에서 선호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두 집단 간의 필요성 인식 차이에 대한 논의가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제도의 불필요성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 및 돌봄 시간의 연장에 관해 더 초점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시간지원 중심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만 길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아지원제도의 이용률에 대한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달리, 연구문제 2인 잠재계층별 특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합니다. 두 집단 중 월등하게 차이가 났던 특징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 외 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이며,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현저하게 이용 여부가 떨어지는 특징은 '선택근무제','원격근무제'입니다. 이런 특징과 이유를 보완하셔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출산 포기나 적은 출산을 한다는 것은 '합리주의 선택이론'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 기반하여 국가가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일·가정양립 정책이 국가마다 확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정책이 확립되는 과정과 내용은 국가마다 상이합니다(최정화, 2021).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은 지금까지 한국의 제도와 상관없이 다른 선진국에서 유용하다고 해서 들여온 정책을 이식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매년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손재희, 김은정, 2014). 따라서,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수요자인 부모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돌봄 및 주거 부담에 대한 분석, 구조개혁 및 사회인식에 대한 변화의 과정에 주목하여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그래야 다양한 항목이 상호작용하여 실효성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시면 일·가정양립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일·가정양립이라는 정책적으로 의의가 높고,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좋은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24년 2학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